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눈부신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고도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복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를 이 연구에서는 물질재 공급 확대에 따른 한계효용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사회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질이 중요해진다. 실제 경험분석을 통해서도 국민의 행복감은 사회의 질, 특히 시민사회역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질을 통제하면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는 사라진다. 한국은 낮은 사회의 질 때문에 소극적인 위험 회피, 과도한 간판 경쟁, 그리고 승자 독식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행복 수준을 높이려면 사회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서 찾아진다.

주제어 지위재, 풍요의 역설, 민주화의 역설, 사회의 질, 투명성, 공정성

I. 경제성장으로 우리는 더 행복해졌나

경제성장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선사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준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러한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많다.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행복감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생활만족감은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이스터린(Richard A. Easterlin)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30% 내외에 불과하며, 또한 그 비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2014년도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SNUAC-2014-009), (주)두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고로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증대되지 않는 현상을 ‘이스터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 이름 붙인 바 있다(Easterlin, 1974).

물론 국가 수준에서 경제성장과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만 주목한 것이므로, 개인들 간에도 소득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 나라 안에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개인 수준에서는 소득이나 자산과 행복감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은 국가의 평균적 행복감을 증대시킨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서는 다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스터린의 문제 제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내외에 불과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선진국의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객관적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이며, 기대수명과 문자해독률 및 상급학교 진학률 등으로 발전을 측정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기준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도 세계에서 12위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화’는 우리나라 정치권의 화두다. 선진화론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니 선진화를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주장인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이다.

유엔에서 발표한 “2013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감은 전체 82개국 중 41위에 불과하다. 대만이 42위, 일본이 43위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성취에 비하면 행복감이 유난히 낮다. 더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 경제력과 행복감 간의 괴리가 더 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1인당 GDP(2012년 기준)가 2만 1562달러로 이스라엘(2만 2606달러)과 거의 같았다. 반면 국민 행복감은 이스라엘(7.30)이 한국(6.27)보다 높았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이스

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데,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역사적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전후해 경제성장과 행복감 간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의 국가군에서는 행복감과 국민소득 간에 매우 가파른 상관관계가 있지만, 1만 달러 이상 국가군에서는 그 기울기가 현저히 낮아지는 반면, 같은 소득군 내에서도 행복감의 격차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환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읽힌다.

II. 물질재에서 지위재로

문제는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 경제적 성장과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질수록 행복감의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체감하는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은 허쉬(Fred Hirsch)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Hirsch, 1976). 그가 관심을 가졌던 사회는 1970년대의 영국으로서, 전후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에 도달했지만, 분배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성적(性的)으로나 미적 취향은 극단적인 개인주의화 경향을 보인 반면, 경제 정책에서는 강력한 국가 규제를 요구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허쉬는 물질재(material good)와 지위재(positional good)를 구분했다. 물질재란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로서 음식, 주거, 의복 등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화들을 일컫는다. 반면에 지위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며, 대체재의 존재 여부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그 상대적 가치가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환경, 교통, 교육, 일자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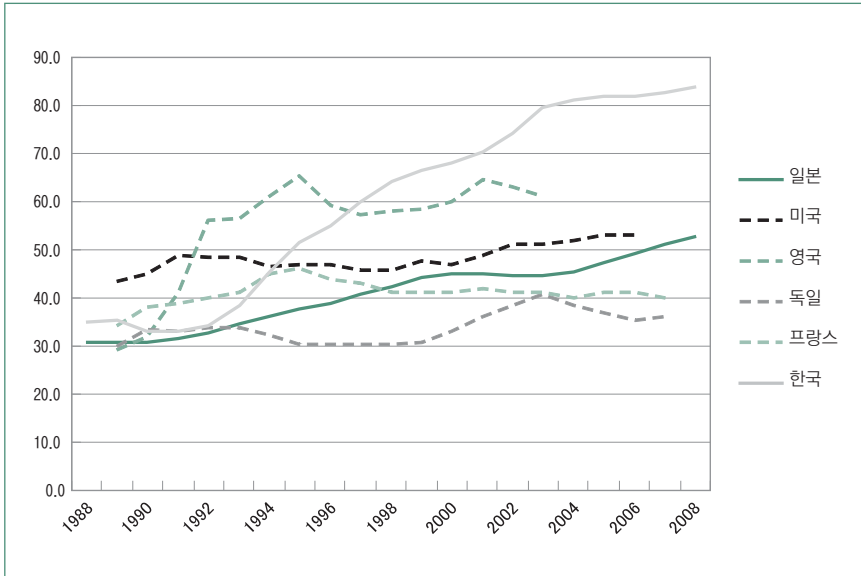
허쉬의 논지는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물질재의 공급을 늘리면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커지지만,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점차 지위재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물질재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불만이 쌓인다는 점에서 ‘풍요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질재를 둘러싼 경쟁은 공급을 확대하면 완화된다. 그러나 지위재는 상대적 서열이 중요하므로, 이를 둘러싼 경쟁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늘 제로섬 게임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지위재는 경제적 지대(rent)나 유사지대(quasi-rent)와 같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고도성장기는 물질재의 확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릿고개의 고통스런 기억을 가진 세대에게 고도성장의 과실은 확실히 강력한 효과를 주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부하게 얻고, 쾌적한 주택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던 이들에게조차 성장의 과실은 삶의 개선이라는 ‘밀물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반면에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물질재에 대한 욕구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더 나은 대학교육, 더 좋은 일자리, 편리한 주거와 쾌적한 환경 등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졌다. 그런데 지위재는 절대적 소유 여부보다 다른 이들과의 비교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그 효용이 늘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급률이 낮은 사회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소수이므로, 도로가 좁더라도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다. 그만큼 자가운전자의 효용은 매우 크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 자동차가 보급되면 교통량이 급증하여 곳곳에 정체가 생긴다. 자가운전자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환경의 쾌적성 역시 상대적이다. 소수가 거주하는 교외 지역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고밀도 개발로 거주자가 늘어나면 쾌적성은 더 이상 누리기 어렵게 된다. 지난 60여 년간의 한국 사회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 물질재에 대한 욕구가 채워진 후,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을 예로 들어 보자. 30년 전과 비교하면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25%에서 85%로 급증했다. 세계에서든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대학 진학률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학 진학률 증가는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교육의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 경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졌다. 특히 이른바 SKY로 불리는 명문대학 입학을 둘러싼 경쟁은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치열해졌고, 선행학습 경쟁을 통해 그 파급 효과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미치게 되었다.



출처: 가와이 노리코(2011).

그림 2 각국의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

문제는 입시경쟁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졸자들이 대량 양산되면서, 좋은 일자리, 즉 청년층이 원하는 대기업 사무직에 취직하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졌다. 결과는 대졸자들의 심각한 청년실업률이다. 반면에 저학력 생산직 노동자는 구하기 힘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장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는 공급의 확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최적화된 수준 이상으로 교육의 공급이 늘어나면, 이에 상응하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따라주지 않는 한 과잉 교육이 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높아진다. 과거 고졸자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대졸자들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택은 지위재의 또 다른 예다. 전국적으로 110%에 달하는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을, 특히 서울에서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낀다. 이는 부수적 희소성(incidental

scarcity)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즉, 얼마나 많은 타인이 그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받느냐 하는 포괄성의 정도에 의해 자신의 만족감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교통체증이 물리적 적체(physical congestion)를 의미한다면, 좋은 일자리나 명문대학 입학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은 사회적 적체(social congestion)를 의미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감은 낮아지고, 제도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심해졌으며, 사회 갈등도 심각해진 현실은 성장과정에서 물질재에서 지위재로 경쟁의 대상이 바뀌게 될 때 드러나는 풍요의 역설을 보여준다. 풍요의 역설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배고픈 사회(hungry society)가 분노하는 사회(angry society)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전상인, 2008). 분노의 증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안이다.

타인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일과 지위 및 물질을 중시하고 경제적 성과가 높지만, 과소비와 과시적 소비 경향도 강해진다. 그리고 비교 성향이 높을수록 건강과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특히 공정 경쟁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향 비교는 자기 발전의 촉매가 되기보다 역기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집단 추종, 극대주의, 이기주의의 성향이 강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행복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김희삼, 2014).

상대적인 위치가 열악한 이들이 누적될 경우 사회적 분노는 심화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7%로 OECD 평균인 16.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는 단순한 노동시간 차이에 그치지 않고 신분 차별에까지 이르고 있다. 노인 빈곤률은 45.1%로 OECD 평균 13.5%의 세 배에 달한다. 노인 100명 중 4명은 78만 원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OECD, 2014). 10만 명당 자살률은 31명으로 OECD 평균 13명의 거의 세 배에 달한다. 반면에 한국의 최근 투표율은 46%로서 OECD의 최하위 수준이다. 1987년 직선제를 모토로 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정치민주화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나, 그 결과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넘쳐난다. 가히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 20대는 취업과 진로가 불안하고, 30대는 거주 대책이 불안하며, 40대와 50대는 노후 대책이 불안한 것이다.

과거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시대마다 어떤 가치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포괄적이고 암묵적인 합의가 분명했다. 197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경제적 가치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1987년 이후에는 ‘민주화’가 시대정신이였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2010년대의 한국에서는 뚜렷한 시대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더 많은 성장을, 혹자는 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불신, 불만, 불안의 시대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긴장감은 훨씬 떨어진다.

하나의 대안은 선진화(先進化)다. 그러나 선진화는 이미 앞서 있는 선진국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뒤져 있는 후진국의 영원한 따라잡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혹자는 ‘善進國’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GDP나 군사력과 같은 경성 파워에 대비되는 연성 파워로서 정보력, 기술력, 도덕자원, 문화적 매력, 제도적 유연성 등을 지칭하는 것인데, 사회의 포용성과 신뢰가 높아지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김진현, 2008). 실제로 한 신문에서는 사회적 효율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프트파워로서 약자에 대한 배려, 공정성, 개방성, 시스템적인 규율 등 네 가지 요소들을 종합하여 ‘선인프라’로 지수화하기도 했다(『매일경제신문』, 2011/3/29). OECD 30개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고르게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종합 순위는 28위였다. 특히 지도층 의무감을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분야는 30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III. 행복과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이처럼 경제성장이 오히려 행복감을 떨어뜨린다는 풍요의 역설이 사실이라면, 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발전이론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발전이론을 종합하고자 한 김경동은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발전의 핵심가치’를 제시함으로써 행복한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개념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경동, 2002: 92-94). 그가 제시하는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삶의 가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삶의 질적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기회의 확대’다. 그는 다시 삶의 질의 향상이란 가치를 두 차원으로 나누는데 ① 육체적으로 살기 좋으려면 객관적 조건이 나

아져야 하고, ② 잘 살기 위해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살기 좋아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객관적 조건은 주로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과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여유를 의미하며, 주관적으로 좋은 삶은 정신적 풍요와 행복감 등을 의미한다. 한편 삶의 기회의 확충은 자원의 배분과 직결된다. 여기서 삶의 기회도 다시 ① 사회적 불평등이나 배제, 차별 등의 분배정의와 관련된 사회정의라는 측면과, ②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선택권으로 나눈다. 김경동이 주목한 발전가치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제도적 측면과 구성론적 측면, 그리고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발전, 혹은 사회의 품격에 관해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개인적 수준의 발전의 총합으로 사회 전체의 수준을 가늠하는 연구와 개인적 수준과는 일정한 정도 독립적인 차원인 사회적 수준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로 대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삶의 질’ 접근법이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사회적 응집성이나 배제, 혹은 사회자본 등 구체적인 사회의 특징을 다루는 접근법과, 지속가능성, 인간개발, 사회의 질 등 보다 포괄적으로 사회의 성격을 가늠하는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Noll, 2002).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회의 질은 각 개인들이 자신의 복지나 개인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공공체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eck et al., 1997). 처음 사회의 질에 대하여 정의한 벡(Wolfgang Beck)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사회의 질은 김경동의 문제의식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차원과 구성적 차원, 그리고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사회의 질은 개인 수준의 삶의 질과 대비되는 사회 수준의 관계의 특성을 의미한다. 즉,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개인의 자기실현이라는 원심력과 사회적 맥락에서 발휘되는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구심력 간에 상호 긴장이 있되 둘 사이에 균형이 유지될수록 사회의 질이 높아진다.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의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축 간에도 긴장과 균형이 유지되어야

사회의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가르는 수직축과 시스템과 생활 세계를 가르는 수평축을 교차하여 영역을 나누었을 때, 각 영역에서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Beck et al., 2001; 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이재열, 2007).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토대가 되는 모두 네 가지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 ① 자원, ② 연대감, ③ 접근과 참여, ④ 역능성 등이 그것이다. 각 구성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지표로 구성될 수 있다.

- ①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안전성
- ②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응집성
- ③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포용성
- ④ 개인의 역량과 능력 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복돋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역능성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공동체의 척도로서 사회의 질을 지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살기 좋은 사회는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인데, ‘위험한 사회’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불신 사회’가 아닌 ‘신뢰 사회’를, ‘배제 사회’가 아닌 ‘포용 사회’를, 그리고 ‘무기력한 사회’가 아닌 ‘활력 있는 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경제적 안전은 인간적 삶을 위한 물질적·환경적 자원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기초적 욕구들이 충족되는 사회가 ‘안전 사회’라면, 그렇지 못한 사회를 우리는 ‘위험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응집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측정하는 데 중요하다. 응집력이 유지되는 사회를 ‘신뢰 사회’라고 한다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적 규범의 일관성과 포괄성이 지지되지 않으며, 집단 간에 이기적 경쟁만이

존재하는 해체된 사회를 ‘불신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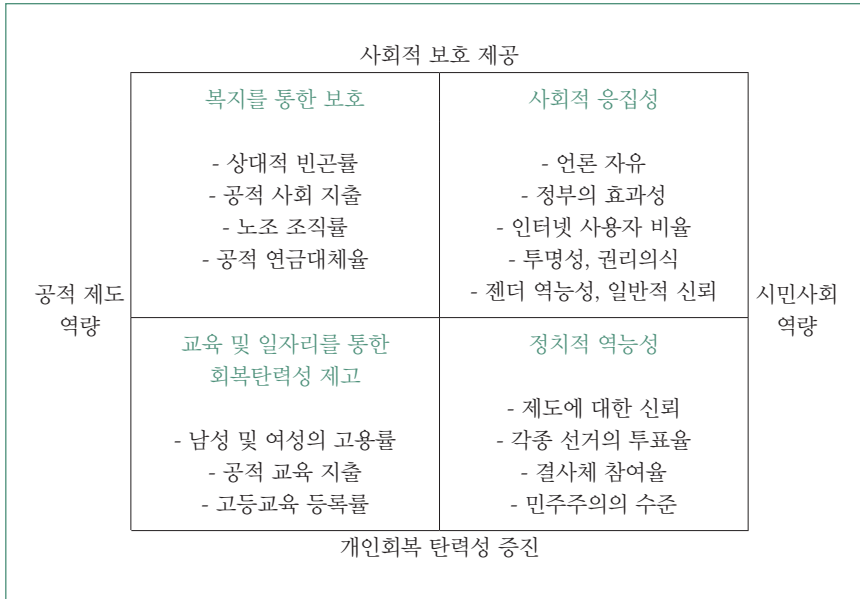
사회적 포용성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나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차원을 구성한다. 사회적 포용성이란 사회 성원들이 지닌 가치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포용 사회’에 대비되는 사회는 ‘배제 사회’라고 할 것이다.

역능성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짜여 있는가를 보는 지표다. 개인의 능력 발휘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활력 사회’로, 그리고 그 반대를 ‘무기력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유럽 학자들은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95 개를 선정한 바 있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그러나 유럽 학자들의 사회의 질에 대한 접근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Yee and Chang, 2011). 첫 번째는 지나친 이론지향성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다. 개념과 이론 수준에서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정작 그 분석틀이 현실과 맞는 정합성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다차원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층위계 분석과 같은 다차원의 지표들로 지지되어야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명시적인 분석의 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그러다 보니, 동일한 변수들이 서로 상이한 영역과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중첩되어 사용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의 질 개념이 가진 유럽적인 편향성이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전 세계의 평균적인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사회의 질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사회의 질을 떠받치고 있는 법치주의 전통을 당연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과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높은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도상국이나 문화적인 맥락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당연시하는 문제들에서 오히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제도의 투명성과 법치주의의 문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의 질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출처: Yee and Chang(2011).

그림 3 수정된 사회의 질 구성 요소들과 구성 변수

분석의 틀을 거시적 수준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의 질을 발전론적 측면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질이 그 사회가 얼마나 진보했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적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 그리고 불행감이 높은 사회의 문제들을 조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개념의 단일 차원성과 간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의 질을 사회적 수준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① 미시-거시의 구분을 없애고 거시사회 수준의 지표를 측정하는 형태로 바꾸고, ②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의 질 개념을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현상으로 국한해야 한다.

그리하여 필자가 택한 대안은 사회의 질을 ‘한 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위협을 다룰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적 역량의 총합’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한편 사회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기능

(대체로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이 매개되는)과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기능(대체로 궁극적으로는 개인 능력의 발현으로 귀착되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마련된 수정된 사회의 질 구성 요소는 그림 3과 같다.

한 사회의 제도 역량은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역량과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역량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복지제도 역량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상대적 빈곤률, 공적 사회 지출, 노조 조직률, 공적 연금대체율 등이 활용되었고,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역량의 지표로는 남성 및 여성의 고용률, 공적 교육 지출, 그리고 고등교육 등록률 등이 활용되었다.

시민사회 역량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규칙에 속해 있다고 느끼고, 서로 결속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 응집성과,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얼마나 정치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언론 자유, 정부의 효과성, 인터넷 사용자 비율, 투명성, 권리의식, 젠더 역능성, 일반적 신뢰 등이었고, 후자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제도에 대한 신뢰, 각종 선거의 투표율, 결사체 참여율, 민주주의의 수준 등이었다(Yee and Chang, 2011).

IV. OECD 국가의 사회의 질과 경쟁의 구조적 조건

OECD 국가들의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들은 부표 1과 같다. 가용한 자료들은 대표적인 거시지표들은 OECD로부터, 그리고 설문조사를 활용한 자료들은 세계가치관조사나 각 대륙별 바로미터 조사 자료들을 활용했다.¹ 사회의 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했다. 먼저 각 국가별로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들을 입력한 후, 각 변수별로 최대값이 100이

¹ 이 분석에 사용한 사회의 질 지표와 원 데이터는 2014년 3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최한 ‘한국형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원고에 활용된 것과 같은 것이며, 여기에 별도로 행복감과 경쟁력 등의 지표를 첨가하여 추가적 분석을 시행했다.

표 1 사회의 질 구성 요소와 행복과의 상관관계

변수	상관계수
로그 국민소득	0.7466**
사회의 질	0.6745**
공적 제도 역량	0.5034**
- 탄력성	0.5886**
- 복지	0.2845
시민사회 역량	0.7642**
- 사회 응집성	0.7316**
- 정치 역능성	0.7124**

주: ** .01 수준에서 유의미

되고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표준화했다. 그리고 Yee and Chang(2011)의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각 부문별 점수를 내기 위해 해당되는 변수들을 산술평균하여 하위 부문별 점수를 산출했고, 이들을 모두 산술평균하여 사회의 질 지표를 구성했다. 그 결과는 부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 결과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사회의 질이 가장 우수한 나라는 덴마크이며, 그 다음 아이슬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순으로서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독일이 14위, 이탈리아 22위, 그리스가 26위다.

한국의 사회의 질은 비교대상 30개 OECD 국가들 중에 28위에 불과하다. 4개의 하위 영역별로 보면, 교육과 일자리 제공 능력은 18위로서 조금 양호하지만, 사회적 응집성은 23위, 그리고 복지 역량이나 시민 정치참여는 모두 29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제도 역량은 28위, 시민사회 역량은 27위다.

사회의 질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간단히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해보니,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0.7466이었고, 사회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0.6745로 나타나서 두 변수 모두 행복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러나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을 나누어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공적 제도 역량과는 0.5034, 시민사회 역량과는 0.7642로서, 공적 제도보다는 시민사회 역량이 행복감과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을 다시 하위 부문별로 나누어 고찰해보니, 공적 제도 역량 중에서도 탄력성은 0.5886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복지 역량과는 0.2845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시민사회 역량을 구성

표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사회의 질(회귀분석)

	(1)	(2)	(3)	(4)	(5)
GDP(PPP)	1.081***	1.094***	.506	0.654	.702*
공적 제도 역량		-0.0006			
시민사회 역량			0.018**		
- 사회 응집성				0.012	
- 정치 역능성					.014^
상수항	-4.382**	-4.478	.457	-.816	-1.155
Observations	29	29	29	29	29
AdjR-squared	.541	.523	.589	.555	.586

주: ^ .1 수준에서, * .05 수준에서, ** .01 수준에서, *** .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는 사회 응집성과 정치 역능성은 각각 0.7316과 0.7124로서 행복과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OECD 국가들에 한정했기 때문에 사례 수가 많지 않아서 많은 변수를 입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선 소득이 주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공적 제도 역량, 즉 탄력성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적인 국가 제도의 역할을 입력한 결과 그 추가적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된 설명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 수준을 통제한 후 시민사회 역량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소득의 효과는 사라진 반면, 시민사회 역량의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고소득 선진국에서의 높은 행복감은 사실상 높은 시민사회 역량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사회 응집성보다는 정치 역능성의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경쟁 및 행복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일까. 우선 제도 역량을 구성하는 보호 역량(복지)과 회복 탄력성(교육 및 일자리)을 교차해보자. 한국은 사회적 위협에 대한 보호는 매우 취약한 반면, 교육 및 일자리를 통해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나은 모델로 인식된다. 전반적으로 보아 보호 역량과 회복 탄력성 제공 역량이 모두 우수한 균형발전을 이룬 나라들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보호 역량과 회복 탄력성 제공 역

량이 모두 뒤지는 ‘결여형’ 국가들로는 터키와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회복 탄력성 제공 역량은 뒤지는 반면, 복지를 통한 보호 수준은 높은 ‘과잉보호형’ 국가들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보호 역량은 낮은 반면 회복 탄력성은 높아서 전형적인 ‘과잉경쟁형’ 체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적 차이는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뛰어난 복지 역량을 갖추고 풍부한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덴마크에서는 실패한 이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많다. 그래서 청년들은 과감하게 창의적인 일에 도전한다. 반면에 복지 역량이 취약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과잉경쟁을 하지만, 위험을 회피하기 급급하다. 실패가 용인되지 않다 보니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소극적 위험 회피 경쟁의 양상은 낮은 청년 창업률에서 확인된다. 기술보증기금의 “창업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로 창업한 기업 3만 7375개 중 20대가 대표자인 창업기업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5년 내내 꼴찌를 기록했다. 2012년 현재 기보가 20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 취급 건수는 겨우 106건으로 40대(6687건)에 비해 1.5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 대표자 연령 통계에서도 20대는 전 업종 중 4.5%를 기록해 60대(6.7%)보다도 낮았다. 이는 선진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2012년 12월 현재 18~64세 전체 인구대비 연령대별 창업 비율을 살펴본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모두 25~34세 창업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미국의 경우 25~34세 창업비율이 무려 전체의 15%였고, 영국과 프랑스도 9%가량이었다. 심지어 독일은 18~24세 연령대가 8% 이상으로 제일 높았다. 국내 청년 창업률이 극히 낮은 이유는 창업 업종이 전통산업에 치중돼 있는 데다 자금 부족과 연대보증 등 창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아주경제신문』, 2014/1/7).

또 다른 증상은 공무원시험이나 공기업시험 등 안정적인 직업에 몰리는 현상이다. 청년층을 포함해 지난해 공무원시험과 초·중등교원 임용고사를 치른 사람은 총 34만 5706명이다. 9급 공무원 시험을 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며 5년 전(13만 7639명)에 비해 48.7%나 많아졌다.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74.8 대 1이었다(『한국경제신문』, 2014/ 12/5).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단 한 번의 실패로 집안이 몰락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이다. 『한국 경제신문』의 오픈서베이와 설문조사에서 ‘창업을 꺼리거나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6%가 ‘한 번 실패하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정부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40.6%가 ‘실패 후 재기 가능한 환경 조성’을 꼽았다.

시민사회 역량을 구성하는 사회적 응집성과 정치적 역능성을 교차하면 또 다른 흥미로운 유형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응집성이 높고 시민정치 참여도 높은 덴마크나 스웨덴에서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해결 의지가 높고, 또 문제를 풀어나갈 제도권 정치도 잘 작동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실력 경쟁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한국은 투명성이 낮고, 각종 기관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다.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규칙과 심판에 대한 신뢰가 낮다 보니,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수치화된 객관적 평가에 매달리는 과도한 간판경쟁의 폐단이 나타난다.

시장주의자들은 경쟁이 가진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과도한 경쟁의 예로 ‘공작들의 꼬리 경쟁’이 거론된다. “수컷 공작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길고 아름다운 꼬리를 키운다. 그러나 그 꼬리는 암컷의 배우자 결정 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추장스럽고, 다른 동물의 공격에서 방해만 되는 낭비다. 한 사회의 경쟁의 도가 지나치면, 공작과 같이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그 낭비가 효율을 능가할 수 있다”(서상철, 2011: 16). 이러한 극단적인 과잉경쟁의 대표적 사례는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전쟁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교육은, 특히 명문대학을 둘러싼 입시는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라는 점에서 경쟁을 추구할수록 점점 더 격화될 수밖에 없고, 소득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절대소득보다는 상대소득, 그리고 소득의 불평등도가 사람들의 생활 만족감이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 가격은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지만, 가치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 속성이다.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지만, 항상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다. 기업은 가능한 유능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하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은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경력을 통해 이론 업적을 보아야 한다. 노벨상을 받은 게리 베커(Gary S. Becker)에 의하면 임금은 그 사람의 가치, 즉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론을 경험적 자료로 검증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임금이 학력이나 경력 등의 인적 자본 변수들에 의해 30% 정도 설명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인적 자본의 설명력은 60% 이상이며, 한 기업에 국한하면 90%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한국이 인적 자본을 제대로 보상해주는 완벽한 시장경제를 구현해서가 아니라,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획일화된 연공형 보상 체계를 기계적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획일적 신호 게임이 강하게 자리 잡은 이유는 바로 공정성 때문이다. 관공서의 예산 배분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년 대비 일정 비율로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입시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치화된 성적순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추천제는 실질적 개성과 능력을 가진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추천자의 공정성과 능력을 신뢰하는 문화에서 작동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작동하지 않으면, 각종 수상 경력과 학교 성적 등을 획일적으로 수치화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이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문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전문가의 능력은 외적 기준보다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에 기반을 둔 동료 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이 취약할수록, 그리고 직업윤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수록 외적인 신호가 내적 가치를 무력화하는 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성장이 아닌, 분배를 염두에 둔 성장, 차등성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정 수준의 실력 경쟁이다. 선행학습 경쟁은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외를 받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다면 하루아침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런 해법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응집력이 낮고 이러한 일을 주도할 제도권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역능성과 사회적 응집성을 높여나가는 일은 궁극적으로 과도한 간판경쟁을 적정 수준의 실력 경쟁으로 대체해 나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된다.

사회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확인한 국가 간 질적 차이는 사회적 위험을 다루는 방식이나 복지정책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첫째, 뛰어난 복지 역량을 갖추고 풍부한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일수록 실패한 이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과감하게 창의적인 일에 도전한다. 반면에 복지 역량이 취약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위험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실패가 용인되지 않다 보니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것이다. 둘째, 투명성이 높고,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에서는 공정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한국은 투명성이 낮고 복지 지출도 적다. 그래서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복지 재정의 증가가 재정 위기로 연결될 남유럽의 불공정한 이중 복지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적고 구성원 간의 신뢰도 높기 때문에 조화로운 공생 발전이 가능하다. 반면에 상대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불신도 높은 한국은 약육강식의 승자독점에 가깝다.

선진국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낮은 소득 수준이었을 때 이미 높은 수준의 시민 역량을 갖추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을 생각해 보면, 스웨덴은 1988년, 그리고 독일은 1991년으로 2007년에 2만 달러를 달성한 한국보다는 약 20여 년을 앞서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의 질을 그 당시 스웨덴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 발견한 사실은 스웨덴은 이미 한국의 5.7배에 달하는 수준의 복지 및 보호 역량을 갖추었으며, 독일도 한국의 3.1배에 달하는 복지와 보호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특히 스웨덴의 공적 사회 지출은 4배, 독일은 3배 수준이었고, 소득세 부담에서도 스웨덴은 한국의 8배, 독일은 4배 더 많았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위상은 당시의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해 뒤지지 않으며, 대학 진학률은 훨씬 높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사회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응집성이나 정치 역능성의 측면에서는 스웨덴이나 독일에 많이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뒤지는 것은 언론 자유, 정부 효과성, 투명성, 일반적 신뢰, 정치참여 및 투표율 등이다.

V. 결론

이 글에서 분석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80여 개국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동일한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들 간에도 국민의 행복감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 한·중·일과 GDP 수준이 비슷한 미국·유럽의 국가들을 골라서 이들의 행복도를 비교해 보면,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인 아시아 저발전 국민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낮은 소득에 비해 행복도가 높은 반면, 2만 달러를 넘어선 동아시아국(한국, 일본, 대만)이나 1만 달러 이하 고도성장국인 중국은 소득에 비해 행복감이 낮았다. 또한 유럽에서도 남유럽 국가들이 소득에 비해 행복도가 낮았다.

국제적 비교에서 행복감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낮은 사회의 질이다. 사회의 질이란 개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양상과 내용을 결정하는 사회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뜻이 깊다. 사람을 평가할 때 재산이나 권력뿐 아니라 인품도 보듯, 한 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경제력이나 정치제도 외에 사회자본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한국의 사회자본은 3만 달러 소득을 넘보는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빈약한 수준이다.

높은 소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북유럽인들의 행복감이 아시아인들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개방적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지탱해주는 풍부한 사회자본을 가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시아 국가들의 투명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신뢰 수준의 편차도 크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을 분석,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경쟁의 양상은 ‘과감한 창의성 경쟁’ 대신 ‘소극적 위험 회피 경쟁’을,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실력 경쟁’ 대신 ‘과도한 간판 따기 경쟁’을, ‘조화로운 공생 발전’ 대신 ‘약육강식의 승자 독식’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행복과 친화적이지 못한 경쟁의 근본 원인은 물질재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루었던 과거 고도성장기와 달리,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이 훨씬 중요해진 최근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은 오히려 저하되는 풍요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체제의 거대 전환이라는 분석틀로 보면, 한국은 과거 고신뢰와 저투명성이 결합한 위계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출발해, 신뢰 수준은 점차 하락하면서, 투명성의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환의 계곡에 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독재형 권력부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의 공통점은 신뢰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강력한 정치 지도력 아래 끈끈함과 의기투합으로 뭉친 ‘권위주의적 동원 체제’의 역동성은 과거 1960~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 모델을 보는 듯하다. 그에 비하면 신뢰와 투명성이 모두 결여된 필리핀, 인도, 이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저발전 국가들은 ‘정글형 갈등사회’다. ‘죽벌 부패’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불신이 양산되었고, 이를 해결할 정부 능력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때 모범적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과 대만은 현재 ‘전환의 계곡’에 머물러 있다. 민주화를 통해 권위주의를 청산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권위까지 빠르게 실종되었고 투명성은 제자리걸음이다. 세월호 사태의 근본 원인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구조에서 찾아진다. 권력과 금력이 만나고, 규제 기관과 피규제 기관이 서로 얽힌 ‘관피아’의 그늘 속에서 공공성은 침식되고 재난은 창궐했다. 재난이 터진 후 실상을 알게 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30여 년에 걸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만족감이 떨어지고 자살률은 급등했다는 점에서 ‘성장의 역설’이, 성공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더 커졌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역설’이 계곡을 감싸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도쿄전력의 은폐 시도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급감한 일본의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도쿄전력 수뇌부나 담당 공무원들 모두 특정학교 출신이다 보니, 국민안전을 위한 감시는 무력화되고, ‘원자력 마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유착이 성행했다. 한때 전환의 계곡을 벗어난 듯 했던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기관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충격적이다.

‘포용적 발전’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중국 또한 최근 들어서는 빠른 신뢰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중국 또한 전환의 계곡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모델의 향후 성패는 신뢰와 투명성 확보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의 유전자를 가지고도 높은 투명성과 국가경쟁력을 달성한 싱가포르의 신뢰 없는 ‘멸균 사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연구대상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화와 탈산업화를 경험하는 사회적 특징으로 인해 기존 신뢰 시스템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대안적인 민주적·합리적 신뢰 체제의 형성은 매우 미약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2014년 12월 7일 | 심사일: 2015년 1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3일

참고문헌

- 가와이 노리코. 2011.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왜 계속 상승하는가?: 일본과의 사례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경동. 2002. 『한국사회발전론』, 서울: 집문당.
- 김재진. 2013.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 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2013. 10. 2).
- 김진현. 2008.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승화.” 『신진화정책연구』 1권 1호, 3-21.
- 김희삼. 2014. “비교성향의 명암과 시사점.” 『KDI 포커스』 통권 제44호(2014. 8. 12).
- 박기웅. 2010. “사회의 질 영역의 시기별 변화에 대한 분석: OECD 국가의 시계열 데이터를 중심으로, 1990~2007.” 미발표 논문.
- 서상철. 2011. 『무한경쟁이 대한민국을 잠식한다』, 고양: 지호.

- 이재열. 2007.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의 질은 어느 수준까지 왔나.” 정운찬·조흥식 편.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3.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최병호 외 편.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시보고서 2013-11.
- 장덕진 외. 2012. “사회발전과 사회모델 비교연구: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13. “착한 성장을 위한 5개국 거버넌스 비교연구: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보고서.
- 전상인. 2008. “앵그리 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철학문화연구소 편. 『철학과 현실』 76호, 30-4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 정책토론회(3월 7일).
- 『매일경제신문』, 2011/3/29.
- 『아주경제신문』, 2014/1/7.
- 『한국경제신문』, 2014/12/5.
- Beck, Wolfgang,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Walker. 1997. “Theorizing Social Quality: The Concept’s Validity.” In Beck, van der Maesen and Walker eds.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ck, Wolfgang, Laurent J. G. van der Maesen, Fleur Thomese, and Alan Walker eds. 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Bonoli, Giuliano. 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s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 495-520.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in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Hirsch, Fred. 1976. *Social Limits to Grow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oll, H. 2002.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 47-87.

- OECD. 2014.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4.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economics/oecd-economic-surveys-korea-2014_eco_surveys-kor-2014-en#page1 (검색일: 2015. 2. 3).
- van der Maesen, Laurent J. G. and Alan C. Walker.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 Issue 1/2, 8-24.
- Yee, Jaeyeol and Dukjin Chang. 2011. "Social Quality As a Measure for Social Progress." *Development and Society* 40(2), 153-172.

부표 1: 사회의 질 구성 지표 및 출처

	지표명	해당 연도	출처
1	Male employment rate	2008	OECD 2008
2	Female employment rate	2008	OECD 2008
3	Public social expenditure		
4	Upper secondary Enrollment Rate	2009	Upper Secondary Graduation Rate,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5	Relative poverty	2007	OECD
6	Public social expenditure	2007	OECD, net public social expenditure
7	Trade Union density	2008~2010	OECD
8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public)		OECD
9	Press Freedom	2011	Freedom House
10	Governance Effectiveness	2010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2008
11	Percent Internet Users	2010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12	Corruption percent index	20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13	Average rights	2011	Freedom House
14	gender empowerment	2009	UNDP
15	General trust	2007~2009	European Value Survey 2008, Latino barometro 2009, Asian Barometer Round 2(2007)
16	Institutional Confidence	2007~2010	Euro barometer 74.2(November-December 2010) Latino barometro 2009, Asian Barometer Round 2(2007)
17	Voter turnout in parliamentary election	2007	IDEA
18	Total organizational Participation	2005~2006	WVS 2005, Euro Barometer(2006)
19	Democraticness of own country/ Satisfaction with Democracy	2007~2010	Euro barometer 73.4(May 2010) Latino barometro 2009, Asian Barometer Round 2(2007)

부표 2: OECD 국가의 사회의 질(표준화된 값, 2011)

국가(순위)		사회의 질 지표	공적 제도 역량			시민사회 역량	정치 역능성	
			탄력성	복지	사회 응집성		정치 역능성	
1	Denmark	90.0	86.9	87.8	86.0	93.2	96.9	89.4
2	Iceland	85.9	84.1	93.6	74.6	87.8	92.2	83.3
3	Sweden	80.9	76.3	73.8	78.8	85.5	95.5	75.5
4	Norway	80.8	73.2	83.3	63.1	88.4	94.2	82.7
5	Finland	75.6	72.6	72.2	73.0	78.7	95.3	62.0
6	Netherlands	68.0	59.7	58.3	61.2	76.3	89.7	63.0
7	Austria	68.0	59.2	50.8	67.7	76.7	73.1	80.3
8	Luxembourg	67.9	52.7	39.8	65.5	83.1	79.3	86.9
9	Switzerland	66.1	63.3	79.2	47.3	68.9	86.1	51.7
10	New Zealand	63.7	58.7	82.3	35.2	68.7	86.1	51.4
11	Australia	60.7	48.6	63.2	33.9	72.8	81.2	64.4
12	Belgium	60.5	53.6	45.5	61.7	67.5	76.3	58.6
13	UK	56.7	55.2	65.6	44.8	58.2	75.6	40.9
14	Germany	55.5	49.6	53.5	45.6	61.4	77.5	45.3
15	Canada	55.0	49.7	60.5	38.8	60.4	81.6	39.2
16	Ireland	51.3	47.7	68.2	27.1	54.9	70.0	39.8
17	France	48.9	47.3	40.0	54.7	50.4	67.5	33.3
18	Spain	48.8	48.1	49.9	46.4	49.4	62.9	35.9
19	US	48.5	38.9	57.4	20.3	58.2	72.0	44.3
20	Portugal	48.2	55.8	69.1	42.4	40.7	55.7	25.6
21	Czech	48.0	51.8	55.1	48.6	44.1	55.7	32.6
22	Italy	46.6	51.7	45.4	58.0	41.4	41.8	41.1
23	Japan	46.5	45.9	64.7	27.1	47.0	61.7	32.3
24	Hungary	44.1	53.2	47.2	59.2	35.0	45.9	24.1
25	Slovakia	43.0	43.2	43.5	43.0	42.8	51.6	33.9
26	Greece	40.6	50.0	43.5	56.5	31.2	36.2	26.3
27	Poland	39.4	39.1	44.6	33.6	39.7	50.7	28.7
28	Korea	33.8	33.0	51.8	14.3	34.5	52.3	16.8
29	Mexico	16.0	21.1	38.2	4.0	10.9	9.8	12.1
30	Turkey	15.6	12.1	6.6	17.6	19.2	8.4	30.0

Abstract

Social Quality, Competition, and Happiness

Jaeyeol Ye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South Korea today is suffering from the paradox of affluence and democratization. Despite being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great economic progress, we are witnessing a sharp deficit in citizens' life satisfaction. This research finds the main source of the problem in the reduction of marginal utility in increased material goods, while at the same time, competition for social status has intensified. Under these circumstances, Social quality, which represents the quality of the society, assumes paramount importance.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people's happiness is highly correlated with and contingent upon the social quality, especially the competence of civil society. And if the social quality is limited, the effect of material wealth on happiness all but vanishes. Because of its low levels of social quality, Korean society is plagued with passive risk aversion, excessive material-based competition, and winner-takes-all outcome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happiness and satisfaction it is imperative to improve the social quality. The articl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enhanced fairness and transparency is the key.

Keywords | social status, paradox of affluence, paradox of democratization, social quality, transparency, fairness

